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민생’ 없고 ‘조국’ 만 있었다

상임위마다 이슈는 ‘조국’...욕설 논란 일기도

정쟁에 분열된 민심...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국정현안에 대한 점검차원에선 '맹탕'으로 끝날 전망이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국감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21일 각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기승전조국'으로 치러졌다. 여야가 국감 초반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려고 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향해 갈날

을 겨누며 '조국 수호'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이른바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치러지기도 했다. 법무위원회와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및 인턴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조국 논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곳곳에서 나왔다.

법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

이 국감 진행 과정에서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호칭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여야가 국감 기간 내내 '조국'만 놓고만 싸우다보니, 정작 챙겨야 하는 '민생' 이슈는 묻혀버렸다. 일부 상임위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책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거론되긴 했지만, 빛을 보지는 못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같은 문제들이 부각돼, 대대적인 감사와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권이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민심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섰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론만 분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국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감 때마다 정치적 이슈가 대두되는데, 정책이나 예산 감사 등의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의 정책성과를 공천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 전 장관 문제가 입학 부정부패 사모펀드까지 광범위했던 만큼 '조국 국감'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감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사회적 끝이 더 깊어졌을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뉴스1

‘윤석열 딜레마’ 한국당...패스트트랙 수사에 ‘난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두둔했지만, 윤 총장이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 입장을 밝히자 고심에 빠지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전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을 향해 검

찰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연일 촉구했다. 윤 총장을 향한 정부·여당의 압박은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 의지를 밝히자 하 루만에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 등

이 이뤄지자 한국당은 이렇지도 않더라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윤 총장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두고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할 경우 조국 사태 당시 윤 총장을 비판을 한 정부·여당과 똑같은 '사법부 압박' 논리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할 경우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으로 이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는 당의 입장을 반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바른미래 분열 · 한국당 러브콜 ... '보수통합 시계' 빨라질까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보수진영의 통합 움직임도 급격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의원 모임(변혁)'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비당권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사실상 돌아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반면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이를 기점으로 바른미래당내 보수파를 향한 '러브콜'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지난 19일 낮과 저녁, 잇따라 당 주최 광화문 정책집회를 진행했던 황 대표와 손 대표는 극명히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바른미래 사실상 '결별' 수순...황교안 "힘 모으자"

한국당내 반발 여전...선거제 개편안 향방도 변수

황 대표는 광화문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연단에서 "지금 이 나라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펀스럴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면서 "자유 우파가 이렇게 모여본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며 '보수통합'을 재차 역설했다.

반면 손 대표는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유 대표 등 당내 '변혁' 의원들을 겨냥해 "이제 한국당에 가겠다는 사람은 더이상 말리지 않을 테니 빨리 가라. 결국 보수 개혁을 하겠다면서 황교안 대표도 만나겠다고 한다. 꼴통 보수를 다시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결별'을 통보했다.

특히 지난 18일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최고위원을 '당직 직위해제' 중징계를 내리

자 비당권파의 반발도 극단으로 치달으며 최소한의 붕합 여지도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조국 정국에서 대정부투쟁을 통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되살리며 보수진영내 '결집력'을 강화했다면, 바른미래당은 반대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정국부터 당내 갈등이 격화되며 '원심력'이 커지는 형국이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이탈'과 한국당 주도의 '재결합' 추진으로 보수통합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힘이 실렸다.

최근에는 내년 총선 공천의 경과가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낼 12월 중순 양 세력간 통합 절차가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던 유 대표 등의 당시 행보를 보수분열의 '원죄'로 규정하며 '복합 당 절대 불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변혁의 다른 한 축인 국민의당(안철수계) 의원들의 행보가 불투명한 것에 더해, 본회의 표결이 초입기에 들어간 선거법 개편안의 처리 여부도 중대 변수로 일한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핵심인 사인 하태경 최고위원 등이 당권파와 결별은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보수통합이 아닌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목표로 내세운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비례의석 확대-50% 준연동형 비례제로 대표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당제 구축 가능성이 열리고 이념적 정체성이 뚜렷한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견해가 중론이기 때문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통합의 당위성, 지지여론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지만 친박계의 입장변화 없이는 쉽지 않은 데다 애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도 보이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또 "연동형 비례제로 대표되는 선거제 개편안이 관철된다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한국당과의 통합보다는 '각자도생'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